

수수 금지 선물 처리

선물의 상담

●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

※ 가액, 사교·의례 목적 불분명한 경우 등

선물의 신고

● 소속기관장에게 신고

※ 국민권익위원회, 감독기관, 감사원,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

선물의 반환·인도

●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

● 반환 곤란 시 소속기관장 등에게 인도

※ 선물 반환 비용은 소속기관에 청구

조사 및 조치

● 위반 여부 조사

●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

● 징계, 과태료 부과 통보

공정하게 경쟁
할 수 있는 사회
청탁금지법이
만들어 갑니다.



청탁금지법 누구에게 적용되나요?

선물 제공 가능 범위

금액 제한없이 제공가능	일반인 (적용대상 아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친구, 가족, 연인 등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● 퇴직한 은사님에게 드리는 선물 ●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선물
	직무 관련 여부 상관 없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●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● 동창회·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
100만원 이하 제공가능	직무 관련 없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친구,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●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다른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● 직장 동료 공직자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
	직무 관련 없음 (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이 인정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● 각종 간담회,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● 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
제공 불가	직무 관련 없음 (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이 인정안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인·허가, 지도·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● 입찰, 계약,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● 인사·평가,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
	직무 관련 없음 (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이 인정안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인·허가, 지도·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● 입찰, 계약,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● 인사·평가,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

적용 대상

비적용 대상



행정 기관

국가 · 지방 공무원

-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, 지자체장 등
- 직업 군인
- 임기제(계약직) 공무원

- 기간제 · 무기계약직 근로자

- 이장, 통 · 반장

- 사병, 사회복지요원

법령상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

-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라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
- 공중보건 의사, 사법연수생

- 퇴직한 공무원

- 주민센터 교양강좌 강사



언론사

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

-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
- 인턴기자
- 언론사의 지사 · 지국 소속 직원

- 외주제작사 소속 임직원

- 프리랜서 기자 · 작가

- 외신기자

-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(포털 사이트) 소속 임직원



적용 대상

비적용 대상



공직유관 단체

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

- 비상임 이사, 감사
-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

-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임직원



각급 학교

대학교 교직원

- 총장, 학장, 교수, 부교수, 조교수
-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
- 대학교 채용 운동부 지도자
- 대학병원 소속 의사, 간호사 등 임직원

- 겸임(초빙)교원, 명예교수
- 시간강사(18.1.1부터 교원에 포함)
- 학생, 조교
- 민간병원 소속 의사, 간호사 등 임직원

초 · 중 · 고등학교 교직원

- 기간제 교사
- 학교 채용 운동부 지도자

- 방과 후 교사
- 자원 봉사자
- 용역계약을 체결한 급식업체 임직원

유치원 교직원(※어린이집)

- 유치원 원장, 교사 (※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대표자인 원장)

- 방과 후 교사 (※어린이집 보육교사)